

건축물 안전대책 대폭 강화

- 초고층·소규모 건축물 등 맞춤형 제도 마련...연중 불시 현장점검 -



◆ '14.2.17,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망 10명, 부상 100여명)

- “건축구조기준”은 습설을 고려하지 않았고,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제품에 미달되는 강재(SS400)를 사용하였으며, 건축주는 운동시설을 집회 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 '14.5.12,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 시공자는 설계도서 상의 기초판 넓이를 줄이고(약 30%) 파일 개수도 누락(약 40%) 하였으며, 감리자는 명백한 부실 시공을 지적하지 않음



◆ '14.5.26,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망 8명, 부상 110여명)

- 수선공사를 위해 방화셔터의 작동을 중지하였으며, 용접 공사 중 발생한 불꽃이 단열재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제도적인 관리수단 부재



◆ '14.5.28,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망 21명, 부상 8명)

-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2층 병원은 불에 잘 안타는 난연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대형 인명 피해 발생



◆ '14.10.17,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사망 16명, 부상 11명)

- 환기구가 공중에 노출된 위치에 있었으나, 출입차단시설이 미흡하였고, 환기구 덮개의 걸침턱 및 용접 시공이 부실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14.11.15, 담양 펜션 화재사고(사망 4명, 부상 6명)

- 샌드위치패널, 역새 등으로 이루어진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화재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단층 건물이어서 난연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이 아님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또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편집자주]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5개 세부대책을 입법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그리고 올해 발생한 의정부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직후 발표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방지 8개 대책중 습설하중 반영 등 7개 대책이 완료됐고 기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량 기준은 올해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전국 1,838개 PEB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 하고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환기구 등 건축물의 부속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전국 3만3,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완료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 중에 있다. One·Two Strike-Out 제도, 안전영향평가제도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4분기에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다중이용건축물 범위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오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건축물 안전종합대책 주요내용

주요제도	내용	일정
One Strike-Out	불법행위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루된 건축관계자 업무 금지	건축법 국회제출(6월)
Two Strike-Out	그 밖의 불법행위 적발 시 6개월간 업무를 제한하고, 2년간 2회 적발 즉시 건축 업무 금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초고층(50층 이상)·대형 건축물에 대한 구조, 인접대지 안전성에 대한 영향평가	
건축지원센터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등 허가관청의 건축행정업무 지원	건축법 시행령 개정(9월)
다중이용건축물 확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기존 5천㎡에서 1천㎡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안전기준 강화	
노유자시설 화재안전	직통계단, 대피공간 등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안전기준 강화	
주요공정 동영상 촬영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용승인 시 허가 관청에 제출	감리세부기준 개정(9월)

1. 건축물안전종합대책

○ 1·2 Strike-Out 제도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와 같이, 건축물의 착공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까지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건축관계자를 처벌하는 제도로, 불법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사고와 연루된 건축관계자는 즉시 건축 업무를 금지(1 Strike-Out)시키고, 그 밖에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업무를 제한하고, 2년간 2회 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축 업무를 금지(2 Strike-Out)시키는 제도다.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싱크홀 등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이상)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성을 공사 시작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건축주는 허가 신청 전에 초고층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전문기관 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건축주는 평가결과를 설계에 반영해 수정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건축지원센터

허가관청이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 공사 감독을 일임하고 있어 불법을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축사·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로서 건축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연간 약 1천600억씩 징수되는 이항강제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허가권자인 각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허가건수가 적거나 직접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국토부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14.2.17, 사망10, 부상125),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14.10.17, 사망16, 부상11), 의정부 화재사고('15.1.10, 사망5, 부상129) 발생 직후 발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도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다. 전국 약 23만5000 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

안은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또한, PEB(Pre-engineered Building) 건축물과 환기구 등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시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5월까지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게 지시했다. ☹

▣ 건축물 안전종합대책 주요내용

분야	안전대책	중점	개선완료	추진중(개정법률)
건축관계자 책임강화	처벌대상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중심	건축주	제조업자, 유통업자(법)
	중벌대상	다중이용 건축물	모든 건축물	—
	처벌수준	징역2년 벌금 1천만원	—	징역3년, 벌금3억(법)
	처벌수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1·2 Strike-Out 제도 (법)
건축행정 절차 강화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심의 (분야)	건축계획 위주	특수구조·다중이용 건축물 등 안전심의 중점	—
	건축허가 (안전검토)	건축사 대행	—	건축지원센터,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법)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분야)	설계	설계+감리	—
건축안전 기준 강화	하중기준	기본적설하중	습설하중(25kg/m ²)	기후변화에 따른 기초 적설량(기준)
	다중이용 대상확대	연면적 5천	—	연면적 1천m ² 이상(령)
	외벽불연성 마감재료	30층 이상 건축물	—	6층 이상 건축물(령)
	내부난연성 마감재료	3층 이상 건축물	—	층수제한 삭제 등 소규모건축물 확대(령)
건축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	건축현장점검	기존제도 운영	건축안전 모니터링 (구조설계 안전성, 샌드위치 패널 난연성능)	철근 내화충전구조, 단열재 등 항목 추가